



의안번호

제115호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18. 11. 19.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15호
----------	-------

제출연월일 : 2018. 11. 19.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대법원 판례[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의 보조금 지원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저촉되므로
- 행정안전부로부터[재정정책과-474(2018.2.6.)]동 조례의 개정 권고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저촉되는 보조금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규정함. (안 제2조)
- 나. 행정동우회의 공익목적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 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아님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가) 예고기간 : 2018. 10. 08. ~ 2018. 10. 28. (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충청남도 소관실과 : 자치행정과(041-635-3596)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퇴직공무원의 시정참여를 통한 시정발전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등)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자문
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협조·홍보사업
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지원 사항) ① 행정동우회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책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할 경우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목적 및 사유 등을 심사하여 행정동우회의 공공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자치행정과장	박 찬 해
	행 정 팀 장	유 재 락 (746-521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역사회</u> 의 봉사와 <u>시정발전에 이바지</u>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퇴직공무원의 시정참여를 통한 시정발전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u>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동우회 지원) ① <u>논산시</u>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통하여</u>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조(사업 등)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u>지방행정 발전과제의 조사·연구와 회보 발간</u>	1. <u>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자문</u>
2. <u>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시정홍보</u>	2. <u>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협조·홍보사업</u>
3. <u>논산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u>	3. <u>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u>
4. <u>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홍보사업</u>	4. <u>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u>

5. 기타 민원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시정발전을 위한 행정동
우회의 활동에 대하여 차량 및 물
품 등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수 있
다.

제3조(지원심의위원회) 행정동우
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
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행정동우회의 보조금 지원에 관
한 사항
2. 행정동우회의 시정발전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기타 행정동우회 활성화를 위한

5. 그 밖에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이하 “행정동우회” 라 한다.)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삭 제>

제3조(지원 사항) ① 행정동우회는
제2조 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책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할 경우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논산시에
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을 신
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목적
및 사유 등을 심사하여 행정동우회
의 공공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
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원사항 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친절행정국장, 행복도시국장, 참여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행정동우회 회장, 행정동우회 부회장 1명, 사무국장 1명(개정 2011. 12.09)(개정 2017.12.29.)

2. 위촉직 위원: 논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 전문가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친절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삭 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여야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삭 제>

제7조(회의) ① 행정동우회의 보조금 지원요청이 있을 시에 시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제척) 제4조제1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시 지원대상자가 되는 행정동우회원은 위원회에서 제척한다.

<삭 제>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삭 제>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5.6.22.)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결산보고 등) 행정동위원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30일 이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준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30)

<삭 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해당없음

나. 추계결과

해당없음

3.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박 찬 해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공2013하,1133]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대상이 된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의회 전·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그대로 공포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재정법이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1항 단서 등에서 예외 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 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 취지 및 ‘권장 사업’의 문언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대상이 된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의회 전·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위 조례안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의 그대로 공포한 사안에서, 서울시 시우회는 전직 서울시 및 그 산하기관 공무원, 서울시 의정회는 전·현직 서울시의회 의원이라는 공직 근무 경력만으로 당연히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로서 근본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조례안이 정한 사업이 서울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항 [2]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항